

종합·국제

한미FTA 만장일치 가결

미상원 재무위... 상·하원 본회의 통과할 듯

미국 상원 재무위는 11일(현지시각)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 이행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재무위는 이날 오후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 이행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한미 FTA와 함께 상정된 미·파나마 FTA도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노동환경이 논란 대상이었던 미·콜롬

비아 FTA는 찬성 18표, 반대 6표로 통과했다.

한미 FTA 이행법안은 지난 5일 하원 세입위에 이어 이날 상원 재무위까지 통과함에 따라 즉시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을 위한 미 의회 절차는 이명박 대통령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전날인 12일 밤 모두 완료될 전망

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한미 FTA 이행법안이 백악관으로 넘어오는대로 즉시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3개 FTA 심의가 이뤄진 이날 상원 재무위 회의장에는 반(反) FTA 시위대가 방청석에서 “일자리 죽이는 무역협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다 의회 경위에 의해 쫓겨나기도 했지만 순조롭게 진행됐다. /연합뉴스



FTA 강행처리 반대

12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한미 FTA 강행처리 반대 애당·시민사회 공동 결의대회’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 14당 대표와 의원, 시민단체 회원 등 참석자들이 반대구호를 외치고 있다.



미국서도 반대 시위

미국 상원 재무위가 11일(현지시각)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를 위해 회의를 열기 직전, FTA 반대론자들이 회의장 밖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홍준표 “한미FTA 이달내 반드시 처리”

野 “단독처리 좌시 안해”

미국 의회가 13일 오전(한국시간) 비준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라디오 연설에서 “우리 국회도 이달 내에 한미FTA 비준안과 14개 이행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대해 “미국 의회는 한미 FTA 이행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14당은 이날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강행처리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방송된 KBS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미FTA 비준안 통과로 한미 군사동맹, 한미경제동맹의 두 축을 통해 시너지를 높이는 ‘쌍끌이 한미 동맹’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홍 대표의 발언은 날치기 상정에 이어 날치기 통과까지 기어이 밀어붙이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국회에 반하는 한미FTA를 강행처리한다면 이는 이명박 정권 몰락의 서곡이 될 것”이라며 말했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14당은 이날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강행처리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13일 오전 백악관에서 공식

李대통령 워싱턴 도착

이명박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미국 워싱턴에 도착, 당내 간의 국빈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 내외는 이날 전용기으로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내려 한덕수 주미 대사와 최경범 워싱턴 현인연합회장과 미국 정부측 인사들의 영접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워싱턴 지역 동포 400여명과 만찬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국빈 방문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조찬을 함께 하고, 알링턴 국립묘지와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참석한 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연합뉴스

환영식을 한 뒤 오바마 대통령과 단독·확대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엇따라 열어 양국간 동맹을 재확인할 전망이다. 두 정상은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북핵문제를 비롯한 대북정책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오후에는 지난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자동차 산업의 본고장인 디트로이트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로 이동, 람 이메뉴얼 시카고 시장 주최의 경제인과 만찬 간담회, 15일 동포간담회에 각각 참석한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연합뉴스

13일 오바마와 FTA·북핵 논의

13일 오바마와 FTA·북핵 논의

이명박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미국 워싱턴에 도착, 당내 간의 국빈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 내외는 이날 전용기으로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내려 한덕수 주미 대사와 최경범 워싱턴 현인연합회장과 미국 정부측 인사들의 영접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워싱턴 지역 동포 400여명과 만찬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국빈 방문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조찬을 함께 하고, 알링턴 국립묘지와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참석한 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연합뉴스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다?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편안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벌초를 하지 않아 황폐화된 묘, 떼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기주의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600만기의 40%인 800만기에게 달하고 있습니다.

● 비변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 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봉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사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소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도서 거친 자연환경과 천자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입니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연합뉴스

슬로바키아 의회 유럽안정기금 부결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 차질 우려

에서 표결이 실시된 EFSF 법안은 승인에 필요한 과반(76석)의 찬성표에 21표가 부족한 55표의 찬성을 얻는데 그쳤다.

4개 정당으로 구성된 연립정부 내 제2당인 ‘자유와연대(SaS)’가 법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유럽은행 자본확충 등 유로존의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EFSF 법안은 유로존 17개 회원국 모두에서 승인돼야 발효되기 때문이다. 슬로바키아를 뺀 나머지 회원국들은 승인을 부결했다.

슬로바키아는 결국 재투표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되지만 재투표에서도 또다시 부결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실시됐다.

라디코바 총리는 이날 표결에 앞서 “내 희망은 오늘 표결에 성공하는 것

이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한다면 재투표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르 당수인 로베르토 피초 전총리는 현 연정이 좌초한 뒤 처리되는 재투표에서는 EFSF 법안을 지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밝혔던은 실각한 라디코바 총리가 스페르와 새 정부 구성, EFSF 법안 지지를 놓고 모종의 거래를 시도할 것이라는 예상됐다.

슬로바키아의 법안 부결로 EFSF의 대출 여력은 현재의 2500억 유로에 유통이 됐다. 법안이 통과됐다면 대출 여력은 4400억 유로로 늘어난다.

다만 이날 표결은 재투표가 조만간 실시되고, 69석인 제1야당 스페르의 지지를 얻어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실시됐다.

라디코바 총리는 이날 표결에 앞서 “내 희망은 오늘 표결에 성공하는 것

/연합뉴스

검찰청·농식품부·경찰청 청렴도 최하위

권익위 발표

다. 농식품부(8.03), 경찰청(8.08), 해양경찰청(8.23)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8.61)와 관세청(8.60), 식품의약품안전청(8.56), 환경부(8.56) 등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금융위는 적정 표본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내부 청렴도(8.71)만 평가했다.

외부청렴도(민원인 대상)와 내부 청렴도(소속 직원 대상)를 비교했을 때 국세청과 검찰청은 각각 9.02점과 8.71점의 후한 내부 점수에 비해 외부 청렴도는 8.47점과 7.26점을 받는 데

에 그쳤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부는 외부 청렴도에서 8.72점과 8.82점을 기록한 데 비해 내부에서 평가한 청렴도는 각각 8.03점과 8.37점을 불과했다.

국토해양부와 국세청, 경찰청 등은 부처별로 정계자로 인한 감점이 커거나 자체 적발에 의한 징계가 50% 이상으로 내부 자본률도 높다고 권위를 전했다.

권익위는 이날 발표한 14곳을 제외한 나머지 82곳에서 평가한 청렴도는 각각 8.03점과 8.37점을 불과했다. 부처별로 정계자로 인한 감점이 커거나 자체 적발에 의한 징계가 50% 이상으로 내부 자본률도 높다고 권위를 받았던 것이다. /연합뉴스

국민 73% “우리 사회 공정치 않다”

특임장관실 여론조사

특임장관실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 이상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기준 의원이 12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공정사회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국민의 72.6%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특임장관실이 지난달

11일 전국 16개 시·도의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57.6%가 ‘별로 공정하지 않다’, 14.9%는 ‘전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고, ‘공정하

다’는 답변은 26.7%에 그쳤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과 비교해 ‘별로 공정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53.3%,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19.9%를 차지했다.

또 조사 대상의 51.4%가 ‘정부

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새롭게 준비한 가을웨딩
총 100가지 부페

객실 500석
조식뷔페(30종) 무료제공

각종 연회행사 할인!
(돌잔치, 회갑연, 송연모임, 기업행사)</p